

文정부 2기 개각, 5개 부처 장관 교체

유은혜 교육·정경두 국방 산업 성윤모·노동 이재갑 여성 장관 진선미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유은혜(56)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정경두(58)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정부 2기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정경두(58)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명하고, 4명의 차관급 인사를 임명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유은혜 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경두 합참의장을,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성윤모(55)

특허청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60) 전 차관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진선미(51) 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유은혜 후보자는 송곡여고와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를 거쳐 이화여대에서 공공정책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대 때 국회에 입성한 뒤 20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 당 대변인을 역임했다.

경남 진주 출신의 정 후보자는 대아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공군사관학교 30기로 군인의 길을 걸었다. 공군참모차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문재인정부에서 합참의장에 올랐다.

대전 출신의 성 후보자는 대전대 성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부 대변인과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거쳐 특허청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서울 인창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뒤 미국 미시간대에서 노사관계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노동부에서 노사정책실장과 고용정책실장을 거쳐 차관까지 올랐으며, 현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재임 중이다.

전북 순창 출신의 진 후보자는 순창여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때 재선에 성공,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까지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 외에도 신임 방위사업청장에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4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문화재청장에는 정재숙 중앙일보 기자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양향자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국정

원 기조실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각각 임명했다.

왕 신임 방사청장은 경남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9회 출신으로 감사원 기조실장, 제1사무차장을 거쳐 현재 사무총장으로 재임 중이다.

정 문화재청장은 무학여고와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했다. 한겨레 신문 문화부,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스포츠문화부장을 거쳐 현재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를 역임하고 있다.

전남 화순 출신의 양 인재개발원장은 광주여상과 한국디지털대 인문학과, 성균관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상무 자리까지 올랐다가, 문 대통령의 당 대표시절 인재영입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현재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을 지내고 있다.

/뉴시스

당정청, 공조체계 제도화 합의 매월 1회 고위 협의회 정례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진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당정청간 공조체계 제도화에 합의했다. 당정청은 고위 당정 협의회를 매월 1회 정례화하고 비공개 고위 당정 모임도 매주 갖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당정청 사후 브리핑을 열어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 2년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지화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란 점에 인식을 함께 했다"며 "이를 위해 당정청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점 법안, 예산안 처리 등 정기국회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당정청간 공조체계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매월 1회 정례화하고 비공개 고위 당정 모임을 매주 갖기로 했다"며 "오늘 총리나 당대표, 원내대표 모두 당정협의를 더 상시화, 정례화 하기 위해 삼일위법 당정협의를 강화하자고 얘기했다. 삼일위법 당정협의를도 가급적 월 1회로 정례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청은 재정 확대를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 기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홍 수석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당정청은 일차적 창출, 서민생활 개선, 저출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했다. 당정청은 오는 11월부터 동기별 1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4차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이해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준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회 여야정 상설협의체 정례화를 추진한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도 정기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국민적 염원과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인식을 함께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관련해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11월로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착실하게 준비해서 진정한 협치 틀로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며 "11월부터 정례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금 생 각해서는 동기별 1회 여야 상설협의체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단 "물론 야당과 협의가 필요해서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당정청은 추석 대책도 내놨다. 그는 "정부는 추석이 불안에 선제적 대응해 추석 3주 전부터 14개 주요 성수품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하기로 했다"며 "명절 기간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전년 대비 6조원 이상 전면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당정청은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지적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증액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책 홍보 강화 필요성도 공감대를 이뤘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비공개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요소를 우려를 표했다. 중부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말했다"며 "필요하다면 보다 조기에 시장을 안정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조치를 당부했다"고 했다.

이어 "R&D(연구개발) 예산이 20조원에서 전년보다 3% 증가했지만 국가 총예산 증가를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당정이 협의해서 추가 증액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혁신 경제 관련 R&D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진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준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

“불법폐기물 고통 국가 책임”

조배숙, 관리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 등 피해 해결 의무화

불법 폐기물 투기와 방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해결에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시·사진)은 23일 폐기물 배출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중대한 피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될 때에는 국가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폐기물로 인한 주민의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와 오염 정화 등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의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폐기물 배출 오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와 환경 복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사후에 배출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무단배출과 청결유지명령 불응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배출자가 근본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일부 기업과 개인들의 폐기물 불법 투기와 매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그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난감한 과제였다.

실제로 전라북도 익산의 경우,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폐석산에 막대한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이로 인한 토양오염과 침출수 유출이 발생했지만 막대한 처리, 정화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며 배출업체가 책임을 방기하고 익산시는 예산 부족으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 주민들의 고통이 지속되어 왔다.

조배숙 의원이 이날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환경오염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배숙 의원은 "파열치한 폐기물 불법 투기로 인한 주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라며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개입하여 오염환경을 정화하는 한편 배출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성기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확보 노력 결실

조배숙, 국비 35억원 확보 익산 왕궁·망성·여산면 등

익산 왕궁면과 망성면(금지마을), 여산면(관연마을) 등이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의 신규 지부로 선정되어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전망이다. 조배숙 의원(민주당·전북 익산)은 29일, 2019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익산 왕궁면, 망성면(금지마을), 여산면(관연마을)이 신규 지부로 선정되어 총 35억원의 국비 예산

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부 선정으로 왕궁면에는 5년간 총 40억의 예산(국비 28억, 지방비 12억)이 투입되어 실내체육관, 건강관리실 등을 갖춘 다목적센터가 건립되고 문화공원 조성 등 지역의 경관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망성면 금지마을과 여산면 관연마을에는 올해부터 3년간 각각 5억원의 예산(국비 3.5억, 지방비 1.5억)이 투입되어 마을회관 리모델링, 산책길 정비, 관련제 경관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김진성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